

민주,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활용방안 검토

채상병특검 부결 대응책 논의 국힘 반대 재표결 통과 어려워 특검 임명 요청안 의결시 가동 국힘 “위법적 발상,李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러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중재안을 포함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경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원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쟁점은 ‘국회 추천 몫’이다. 지금은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규칙 개정은 운영위 소관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원내대표다. 민주당은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정

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기존 위원 가득한 특검법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었으니,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야권이 국회 특검법사 전원을 선출한다는 특검법 구상안을 언급하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4건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나.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주철현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시급”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여수 갑·사진)이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특위 명의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주 위원에 따르면 작성기획단장 등 기획단 구성원 몇몇이 극우·친일 역사관으로 문제가 된 단체 활동에 참



여했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족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도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따라 민주당 특위 차원에서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이력으로 문제를 일으킨 단원들을 새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진숙, 보건복지 현장 간담회서 정책 발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을·사진)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국민의 삶으로 전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날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보건복지 인프라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을 찾아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기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서비스 단절·중복 문



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완 문제 △청년 특성을 반영한 비대면 상담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건복지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답을 찾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문금주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14일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축산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



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어 재원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재원의 출처와 책임을 농림부와 해수부로 명확히 해 임업 및 농수축산업 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진욱 “GIST AI대학원, 국회 차원 협력할 것”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 갑·사진)은 지난 12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주과학기술원 AI(인공지능) 정책전략대학원 개원식에 참석해 “국회에서도 대학원의 비전과 목표에 적극 공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 AI 정책전략대학원은 AI 윤리와 정책 및 전략, 과학기술 선도라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개원했다”며 “AI 선도도시 광주’의 위상



이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를 맞아 국가 정책과 산업 전략 및 방향 설정, 미래 비전에 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대학원은 이런 시대의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전략 기지이자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IST AI 정책전략대학원은 국내 최초 AI 정책대학원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경호원들에 이끌려 연단에서 내려가면서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도중 발생한 총격으로 귀 부분을 다쳐 피를 흘렸으며 총격범 등 2명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P/뉴시스

윤, 美 트럼프 피습에 “끔찍한 정치 폭력”

SNS 메시지 “조속한 패유 기원” 여야 정치권 “정치 테러”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에, ‘끔찍한 정치 폭력’이라며 조속한 패유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패유를 기원한다.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한다”고 적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며, 한국민

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이끈 지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유를 기원한다. 또한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라며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벌어진 암살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떠한 이유든 폭력과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 트럼프 후보의 조속한 패유를 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11월 미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귀에서 피를 흘리는 부상을 입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시당, ‘상임위 부결’ 시의원에 당론 준수 촉구

교문위원장 2차 투표도 과반 미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광주시의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2일 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당론을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것으로 전날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생한 상임위원장 선출과정 당론 미준수에 대한 조치다.

전체 광주시의원 23명 중 민주당 소속

이 21명으로 내부 경선을 통해 단독 입후보한 민주당 의원들이 겨우 과반을 넘겨 선출되거나, 한 의원은 2차까지 실시한 투표에서도 과반 문턱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구체적으로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후보는 찬성 14표, 무효 5표, 기권 4표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후보 찬성 14표, 무효 4표, 기권 5표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후보 찬성 12표, 무효 7표, 기권 4표 △명진 교문위원장 후보 찬성 11표, 무효 7표, 기권 5표 등이다.

이는 앞서 이뤄진 민주당 내 의장단 경선 담합 후유증과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상임위원장 선거 중 표 이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의장단 경선에서는 ‘감투’를 놓고 흥정이 이뤄졌고, 특정 상임위에 11명이 몰려 조정을 하지 못한 채 결국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촌극도 빚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의 당론 미준수 등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시의원들은 지난달 19일과 29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광주시의회 의장단과 5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해 당론으로 확정된 바 있다. 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문화위원장 재선거를 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